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위원장과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군) 간사,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간사 등 소속 위원 14명은 21일 무주를 찾아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았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용담댐 방류 피해 人災" 〈인재〉

피해 4군 범대책위 등, 무주 부남면 현장 찾은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 피해 사실 알려

피해보상·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 진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안호영 간사(더불어민주당, 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등 소속 위원 14명이 지난 21일 무주군 부남면 용담댐 방류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을 진행해 피해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댐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확인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부남면 방문에 앞서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상황 등을 살폈다. 이어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송옥주 위원장은 "현장을 와서 보고 주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하고 그동안 대체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가 오고간 만큼 탁상공론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과 더 깊이 소통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장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등 4개 군 주민대표들이 모두 자리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군이 군별 피해상황을 브리핑하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와 주민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며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든 절차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 관리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며 "한 점의 의혹이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없이 제대로 결과가 찾아질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김영훈 단장은 "전례에 없는 폭우와 피해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주민여러분이 입은 피해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우려하시는 대로 환경부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상절차 역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4군 범대위에 따르면 사고발생 8일 전인 7월 31일까지도 90.2%의 저수율 유지로 홍수기 제한 수위(261.5m)를 초과했지만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여 수위조절에 실패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에는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초당 297.63톤을 방류하다가 8일 초당 최고 2,919.45 톤까지 방류를 하며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무주와 영동, 옥천, 금산 지역이 입은 수해는 용담댐의 홍수조절 실패에서 야기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4군은 범대책위와 피해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피해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4개 지역은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등지를 찾아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농산물 전액 보상, 홍수대응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경찰, 스스로 개혁 노력… 국수본 완결성 높여야"

문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사

"강도 높은 자기 혁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 책임성 높여 국수본 완결성 높이면 국민은 수사역량 더 신뢰"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며 위법 집단행위 엄정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의 성과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조직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 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도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흔들림 없이 치안에 나서는 경찰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민주, 공수처 출범 '최후통첩'

당내 법사위원들 "27일 곧바로 법 개정 착수… 흥정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7일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고 법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외부 견제 기관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만이 검착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동참할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연계해 민주당에 협상을 공식 제안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검사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27일에 바로 법안 1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못박았다.

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 여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의 공수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민주-열민 의원 27명,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7명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27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비망록에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및 수사, 기소권 농단의 최고윗선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도의회 교육위, 내년 본예산 예비심사 '준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찬회 정례회는 내달 9일부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1일 다음달 9일부터 개최하는 제377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찬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연찬회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사전설명을 듣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 예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향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방향성을 잡고, 올해 논의된 내용이 내년에 계획 중인 사업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예산 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한 시간으로 예산심사에 앞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에 교육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위원회 의원 및 도교육청 각 실.국 과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연찬회를 진행했다.

각 국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이면 올해와 다르게 학생들이 정상 등교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과 같은 학교생활을 하는 데 지장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위해 필요한 절차이기에 고심 끝에 소규모로 이런 자리를 가졌다"며 "오늘을 계기로 도교육청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영규 도의원 "아태마스터스 개폐회 장소 익산으로 변경을"

2022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준비를 위해 전북도가 올해 6월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무처 발족을 완료한 가운데, 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를 익산으로 변경·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익산시를 적합지로 내세운 이유로, 먼저 지난 2018년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하면서 현 익산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를 마쳤다는 점이다. 이어,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생활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 익산시민의 심정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굴지 기업의 도산 및 폐업과 인근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연쇄효과로 인해 익산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며, 끝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사용일정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익산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 건수 64%로 급증

민주 한병도 의원 "처벌수위 높이는 등 대책 마련 필요"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 5,329건(73.2%)이 강간.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